막판까지 초박빙… 피말린 무안·신안

악천후 섬지역 개표 늦어져 긴장·초조

해남·완도·진도도 숨막힌 살얼음 승부

18대 총선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였던 해남·완도·진도의 개표 상황은 한 편의 숨막히는 드라마였다. 4시간여의 피말리는 접전 속에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개표 결과에 후보들은 가슴을 졸이며 환호와 좌절의 밤을 지새웠다.

초접전지역으로 분류됐던 무안·신안 선거구에서도 3명의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각축을 벌였다. 또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격돌했던 수도권 초접전지역에서는 10일 새벽 개표가 끝날때까지 수십표에서 수백표를 놓고 시소게임이 벌어졌다.

민주당 텃밭에서 현역 의원 2명을 물리치고 공천을 따낸 해남군수 출신 민화식 후보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무소속 김영록 후보의 대결은 당초 민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선거운동 중반 터진 민 후보의 금품살포 의혹으로 판세가 요동을 치면서 섣부른 예단을 불허했다.

7시10분께 처음 나온 진도지역 개표 결과는 615대 614로 김 후보가 한 표차이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5분여 뒤 해남지역 투표함을 열기 시작하면서 민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추월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상황은 1시간여동안 계속됐다. 두 후보는 45~46%의 득표율로 소수점 이하의 손에 땀을 쥐는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양 후보의 오르내리는 득표 수치에 눈을 뗄 수 없는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두 후보 사무실과 개표장 주변에서는 수차례 환호와 탄식이 번갈아가며 터져나왔다. 100여표차 안팎의 초접전 양상은 오후 8시10분께 완도지역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김 후보가 완도지역 표의 70% 이상을 독식하며 1천여표차 이상 격차로 앞서가기 시작한 것이다. 승부의 기점이었다. 이후 김 후보는 3천여표 차까지 격차를 벌였으나 민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 밤 10시10분께는 1천100여표차로 다시 따라 붙었다.

하지만 김 후보도 만만치 않았다. 10시20분을 넘어서면서 다시 민 후보와 격차를 3천여표차로 벌리며 승기를 놓치지 않았다.

무안·신안선거구에선 기존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른 이변이 연출됐다. 사실 이 지역은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초접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조직을 내세운 황호순 후보와 DJ 바람을 탄 김홍업 후보, 무안 토박이론을 내세운 이윤석 후보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KBS·MBC 출구조사에서는 황 후보 34.0%, 김 후보 32.2%, 이 후보 28.1% 등으로 뜨거운 경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초반 개표 결과는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였다. 무안지역 투표함의 개표가 앞서 진행되면서 무안출신인 이 후보가 5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두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앞서간 것이다. 저녁 8시50분께 이 후보는 2위인 김 후보를 5천600여표차까지 따돌렸다. 신안지역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 지역 출신인 김 후보와 황 후보가 맹추격을 시작했지만 이 후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격돌한 수도권 초접전지역도 한밤 드라마를 연출했다. 서울 송파병, 금천, 구로갑, 경기 성남 수성 등에서는 표 차이가 작게는 한자리 숫자까지 좁혀지는 시소게임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무소속 이윤석 후보의 무안 사무실에 모인 지지자들이 시시각각 전해지는 득표상황을 체크하며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총선 위반 294건 적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29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24건을 고발하고 16건은 수사의뢰, 254건은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도 29건에 달했다. 금품·음식물 불법 제공 건수는 광주 8건, 전남 13건 등 모두 21건이었다.

17대 총선에서는 광주 206건, 전남 430건 등 광주·전남에서 모두 63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선 위반사례가 절반 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도 광주에서는 모두 41건 52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에서는 108건 155명을 단속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광주지검은 고발 및 인지에 의해 광주와 전남에서 총 8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홍행기·최권일기자 redplane@

총선 이후 '50배 과태료' 유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이 끝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나 가족, 정당 당직자가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된데 대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 대상이다.

또한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연합뉴스

술 취해 투표용지 찢고 행패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9일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이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구 쌍촌동 쌍촌주공아파트 사회복지관 내에 마련된 선거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고 소리를 지른 뒤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무2동사무소 직원 송모(37)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

○…이씨는 만취 상태에서 투표하러 왔다가 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가던 중 "통합민주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송씨가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

○…담당 경찰은 "이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귀가시켰다"며 "이씨가 투표소에서 소리친 행위가 특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

"지역 현안 차질 없어야 할텐데…"

민주당 패배에 시·도민, 문화수도·엑스포 등 차질 우려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이 한나라당의 압승과 통합민주당의 패배로 끝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행정·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광주·전남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정권이 교체된 데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도 통합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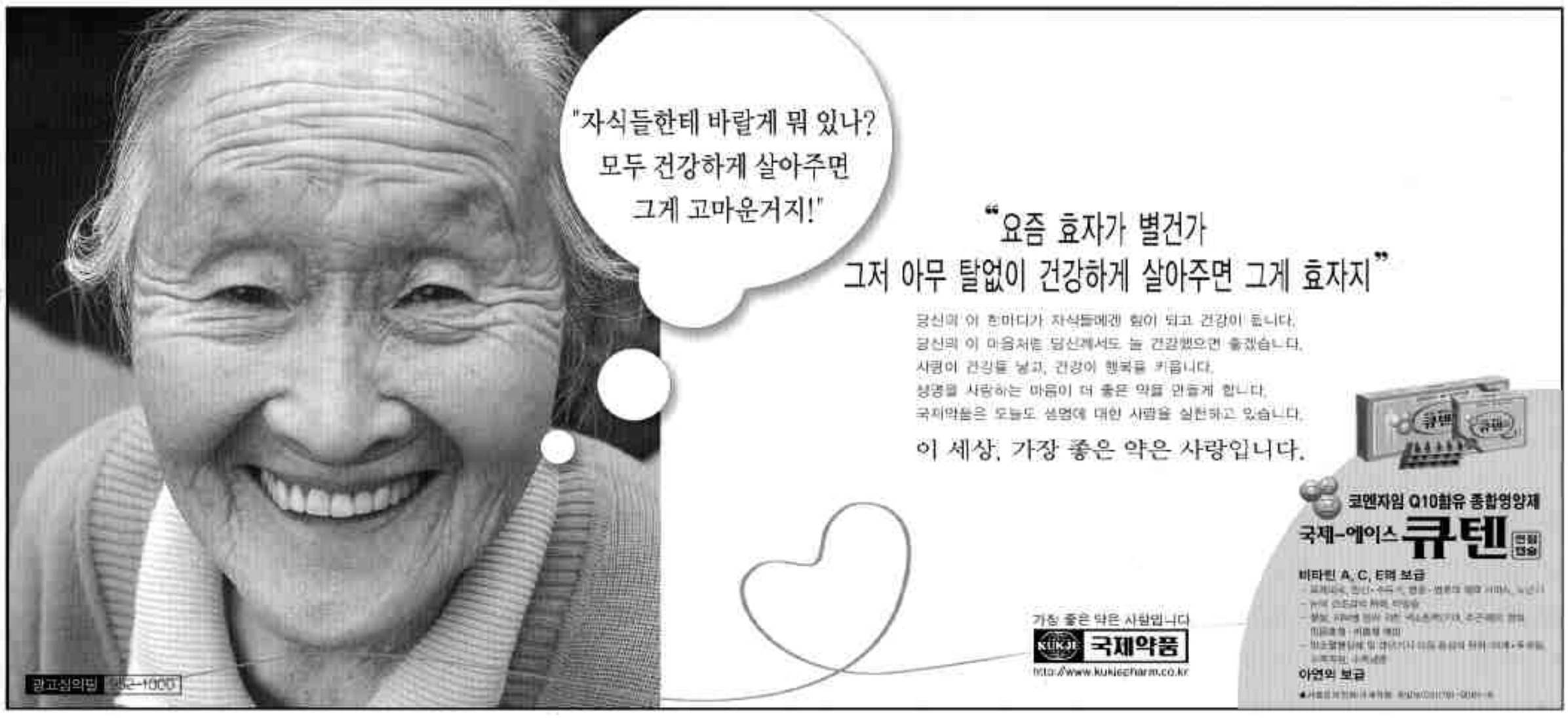
주민들은 한나라당이 중앙과 지방의 행정·입법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만큼 '호남 홀대'에 따른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 2012 여수엑스포,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랬다. 또 광주·전남지역 총선 당선자들은 정당·이념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도 주문했다.

회사원 문형철(28·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광주문화중심도시 정책과 여수 엑스포 관련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국회의석까지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본격적인 계획 축소 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형록(26·조선대 법학과 3년)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내각 인사에서도 호남 인맥 소외가 심각했는데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해 호남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특히 취업에도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걱정했다.

주부 이진선(35·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호남소외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호남 차별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주문했다.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노태봉(40·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한나라당이 정권 창출과 거대 여당을 잇따라 만들어 낸 만큼 이젠 지역 차별 등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